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

유광홍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건축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1·2·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정책이슈나 방향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차 기본계획은 처음으로 건축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건축정책을 먼저 도입·운영하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건축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차 기본계획은 계획 실행력에 중점을 두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가 TF팀 분과별 간사를 맡아 1차 계획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책이슈와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전문가 TF팀을 더욱 세분화하여 구성·운영한 점이다. 1·2차 계획에서는 총괄분과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산업·문화에 대한 3개 분과로 구분하여 TF팀을 운영하였으나, 3차 계획에서는 9개 분과로 세분화하였고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두 번째로는 국민 1,000명과 건축 분야 전문가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지난 10여 년간 이뤄진 건축정책의 체감 정도와 건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



댓글 토론 등 소통 창구

축정책 이슈 및 현안을 파악하는 등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보다 폭넓게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 번째로는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창구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idea.aurum.re.kr)’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이슈에 대해 댓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국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런 부분이 기존 계획 수립 방법과의 차별점이다.

처음으로 추진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의 현안을 진단하거나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건축과 공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특정 주제를 제시하지 않고 열린 주제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참여 방식 또한 정책영상(UCC), 포스터, 에세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전에는 총 51건이 출품되어 심사를 통해 대상·최우수상 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5개 등 모두 9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소소한 변화부터 차곡차곡!’은 건축정책이 일상생활환경에 대한 작은 변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건축정책의 방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비대면 시대, 공공건축물 이용하기’의 정책 아이디어는 정책목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조성과정 개선과 함께 두 번째 정책목표인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재해 재난 대응 항목에 반영하였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빈집 및 노후 건축물을 지역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생하여 활용하는 과제, 건축정보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도 기본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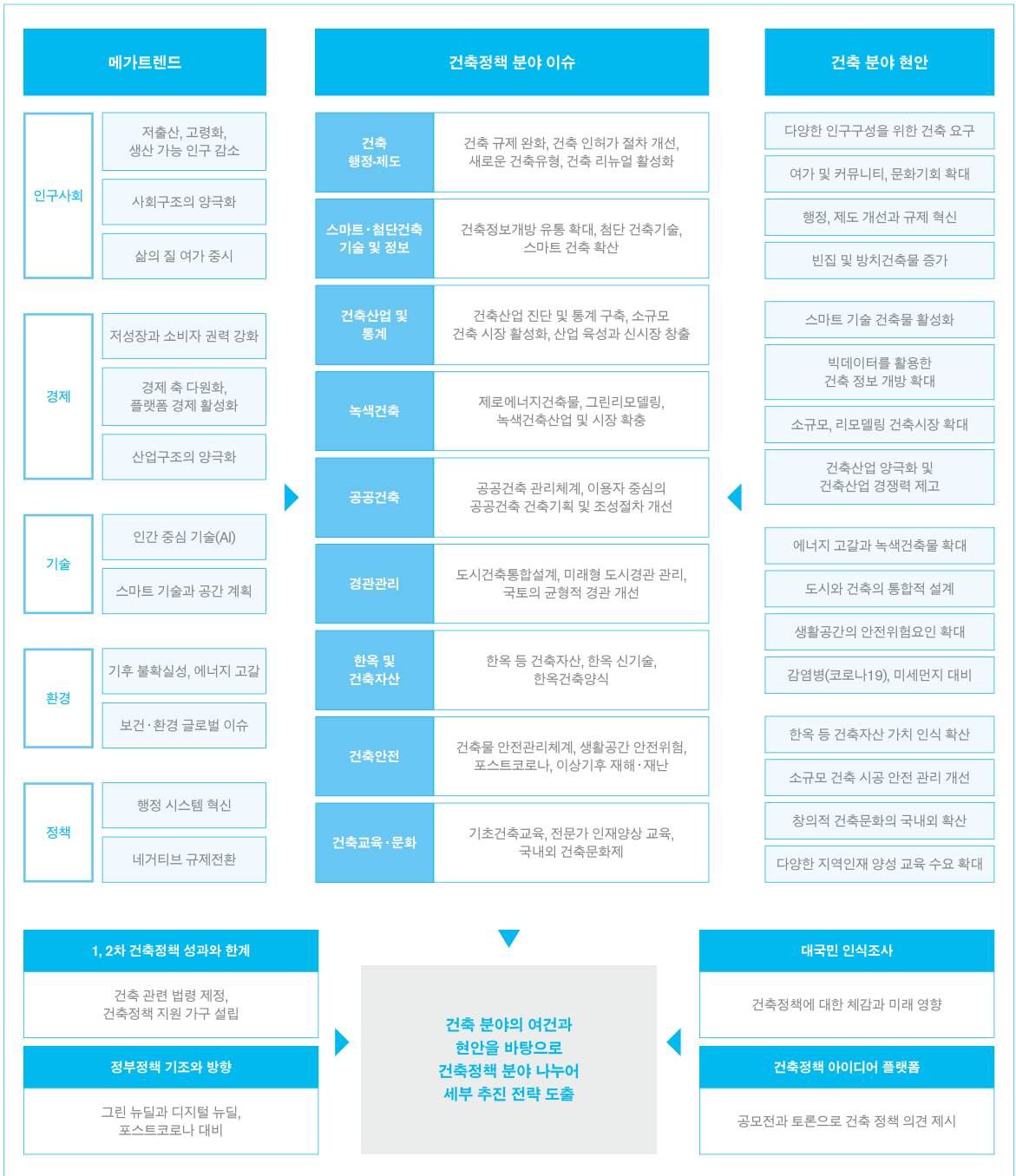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받은 '소소한 변화부터 차곡차곡!(좌)과 우수상 수상작 '일상에서 건축으로'(우)

건축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

건축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은 이미 「건축기본법」에 담겨있다. 기본법 제7조부터 9조에 명시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을 구현'하고,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을 위해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건축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 및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건축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이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축의 공공성'을 세분화하여 정리하면 9개의 건축정책 세부 분야인 '건축안전', '공공건축', '건축행정·제도', '스마트·첨단건축기술 및 정보', '건축산업 및 통계', '녹색건축', '경관관리', '한옥 및 건축자산', '건축교육·문화'로 구분되며,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TF가 구성되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분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기술 및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총



메가트렌드와 건축 분야 현안에 대응한 분야별 정책이슈

22차례의 전문가 TF 분과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수차례의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9개 분야별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공공건축 혁신, 건축안전, 탄소중립 건축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일상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과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이다. 또한 이 같은 건축물이 모여 만들어지는 ‘행복한 도시’는 사람 중심의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와 환경이 배려된 스마트한 도시를 구현하자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①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 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②지역 건축안전 및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③건축산업 구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

추진전략 1. 공공건축 혁신으로 국민 일상 공간환경 개선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건축의 디자인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관리하고, 공공건축 발주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규모 공공건축의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의도 구현 제도를 정착하고,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공건축 자산을 활용·관리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전략 2. 입체적·통합적 계획으로 균형 있는 도시공간 관리

그간 토지이용을 다루는 2차원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계획이 이루어져 건축물, 도로, 가로시설물, 조경시설 등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전체 도시 공간의 구조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시건축 통합설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와 비도시 간 경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도시 지역의 건축경관 관리체계 개선 ▲신기술을 활용한 3차원 경관관리 ▲생활밀착형 도시경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추진전략 3. 건축자산 보전과 건축 인식 향상으로 건축문화 진흥

그간 건축자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자산으로의 보존이 아닌 부동산 수익 등이 우선되면서 파괴적 개발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건축자산의 무분별한 가치 훼손 및 멸실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건축주와 발주자의 건축문화 인식 함양을 위한 건축자산 체험기회 확대 및 다양한 계층별 건축교육 프로그램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전략 4.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 보급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주도의 녹색건축 성과를 넘어서 민간 부문의 건축물까지 녹색건축으로 확대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의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시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녹색건축 재원 마련을 위한 금

용모델 개발 ▲녹색건축 경제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등의 정책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추진전략 5. 미래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환경 관리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안전관리 규제 및 지원 제도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전기준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마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조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건축물 예방 계획기준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추진전략 6.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한 지역 생활공간 조성

장기방치건축물, 빈집, 저이용 유휴공간과 함께 도심 공동화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에서의 안전사고와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 지역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 및 도시환경도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거점 공간인 동네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하고, 생활안전 실내환경 개선사업과 저이용 공공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확충사업 그리고 빈집과 유휴공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계획에 포함하였다.

추진전략 7.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소규모 건축시장이 건축산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는 중대형 규모의 건설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소규모 건축시장은 건축주 직접시공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부실시공과 품질 보증을 위한 성능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소규모 시공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통계 개발을 비롯하여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도 계획에 담았다.

추진전략 8.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용자 포용 건축행정·제도 개선
 우수한 건축물 양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 등 비효율적인 건축행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건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산업 통합재정 확보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편 및 기준 개선과 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계획에 포함시켰다.

추진전략 9. 첨단 건축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건축 구현
 ICT 기반의 첨단기술 발달, 신소재 기술 융합발전 등으로 건축 또는 도시와 관련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건축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스마트홈이 빠르게 성장·확산되고 인공지능이나 AR·VR과 같은 기술이 건축산업에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첨단 건축기술로 건축 생산성을 높이고 해당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과제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건축정보 개방 확대 및 건축통합허브 구축 등 건축 분야 신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육성 정책도 계획에 반영하였다.

지속가능하고 실천력 있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을 통한’ 또는 ‘건축에 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이 국민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이 제도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처음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던 10여 년 전에 여러 전문가의 우려에도 그간 녹색건축, 건축물 관리, 건축안전, 건축자산 등 다양한 법이 마련되고 부문별 계획도 수립되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한옥센터 등과 같이 전문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건축을 ‘민간자산으로서의 건축’보다는 ‘국가자산으로서의 건축’으로, 「건축기본법」의 근본 취지인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합일된 건축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은 건축정

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해외 건축정책 동향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체계적이고 열성적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건축정책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역할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를 두고 정책을 추진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건축'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담는 노력을 보다 경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정책을 통해 제시된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도 중요하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정책이나 사업은 건축의 특성상 계획이 수립된 이후 기획-설계 과정을 거쳐 실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간과 장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계획의 성과도 단기간에 드러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당장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영현, 조상규, 임현성. (201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김영현. (2015). 건축정책 변화에 따른 전망. 대한건축학회, 59(1).
- 3 유광흡 외. (202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